



노동자 운동

건설노조 탄압 반대 2~3면

민주노총 간부 4인 보안법 기소 6면

윤석열이 한국 판 대처? 4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적 국가 탄압

강화 추세

5면

전세 사기

10, 12~13면

간호법 논란

14~15면

청소년 마약사범

폭증?

16면



**윤석열 퇴진 운동의 앞날과
노동운동 7~10면**

건설

노동자들이 전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중요하다

관련 기사 2~3면

건설 노동자들이 말한다

장현수 울산건설기계 지부장

먼저, 정부가 공격하는 건설 현장의 관행들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노조 전임비 문제는, 건설노조 활동하면서 타임오프제 적용을 받고자 하면, 일반 사업장 기준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공정마다 계속 팀과 조합원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임단협을 통해서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과 공사비 규모를 따져서 전임비를 얼마간으로 정하는 겁니다.

타워크레인 월레비 문제는 초과 노동과 작업 외의 일을 사측이 요구해서 생긴 거예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그 일을 안 해 주면 사측은 다른 장비를 불러 비용을 두배 이상 줘 가면서 작업해야 하니까, 타워크레인이 서 있는 김에 작업을 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에 대한 수당이 월레비입니다. 2~3년 전부터 명칭을 바꿨어요. 월레비라고 하면 ‘접대비’나 ‘급행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성과급이라고요. 법원에서도 임금의 하나로 인정받았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다면, 20년 동안 안 잡아가고 뭐 했습니까?

그런데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협박”이라고 하고, 집회를 하면 “공갈”이고, 임금 합의를 하면 “갈취”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현장에서 건설기계 사고가 났습니다. 합의를 거쳐 [사측에게서] 사고 합의금을 받았어요. 사고 합의금은 장비 수리비로 다 썼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것조차 갈취하면서 조사하고 있어요.

휴게실

건설 현장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니 사람들이 안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 고령화가 심했어요. 전에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휴게실도 없어서 웃도 차에서 갈아 입었어요. 돈도 박하게 주고, 체불되는 상황이었어요.

현장 조건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화장실, 탈의실, 식당, 샤워실, 휴게실도 만들었습니다. 호칭도 ‘야’, ‘어이’에서 ‘목수님’, ‘철근 팀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2~3년 전부터 청년·여성 노동자들도 건설 현장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노동자들과 숙련된 연배 있는 선배들이 잘



맞춰 가며 일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 다.

요즘 현장에서는 사측이 교섭은 말 할 것도 없고 노동조합을 아예 만나 주 지도 않고, 현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까지도 합니다.

노동조건도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기계 부문에서는 현장에 중간업자가 있는데, 이자들이 중간에서 ‘알선료’, ‘소개료’ 명목으로 착복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눈치를 봤는데, 지금은 눈치도 안 보고 대 놓고 착복합니다.

건설 현장은 8시간 노동이 정착돼 왔 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9시간 노동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임금 깎는 것도 다 반사이고, 체불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공격하는 목적은 ‘불법 행위’ 때문이 아니라, 눈엣가시였던 건설노조를 건설 현장에서 숙아 내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집회 에 건설노조가 대다수 참가해 왔고, 정 권 입장에서 건설노조를 그대로 내 버려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 습니다.

경찰 압수수색 영장이나, 검찰 기소 장에는 무형지 시설이나 나올 법한 얘 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건설노조의 진원지였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얘기도 나 옵니다.

7월 총파업을 5월 말이나 6월 초로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배제되고 있고, 들어가 있던 현장에서 쫓겨나는 일도 일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조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 고요. 먹고살려면 좌고우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퇴진 안 하면 우 리가 죽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 건설노조연대

박재순 서울경기건설 기계지부 사무국장

정부가 건설노조를 “공갈”, “협박”으 로 공격하는데, 교섭이 잘 안 풀리면 노동자들이 집회하고 파업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갈이고 협박인가요? 그건 노동조합터러 집단행동 하지 말 라는 거죠.

양희동 동지도 노조 활동을 공갈죄 로 공격한 것에 모욕감을 느꼈던 거잖 아요. 집시법이면 또 모를까. “건폭”이 라고 해서 수사도 조폭 담당 형사들이 한다고 해요. 노동조합 활동한 것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강패, 사기꾼 대하듯 이 대한다고 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건폭” 수사에서 구속시키면 1계급 특진시킨다고 하니 형사들이 기를 쓰고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전세 사기에 30명 특진 배정했다는 건 설 노조 수사에 50명 배정이란니, 이게 대 체 뭘니까.

그동안 노동조합이 투쟁해서 노동자 들 일당도 올리고, 안전 관리도 강화했 어요. 5~6년 전만 해도 일당이 17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25만 원까지 올린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산재로 1년에 700명 넘게 죽었는데 요즘은 그나마 6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안전 관리도 한 덕분이죠. 안 전 관리가 “폭력”, “협박”인가요?

이렇게 건설 노동자들이 싸워서 따내 니까 정부가 건설노조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화물노조 때려잡고, 그 다음 타깃이 된 거죠. 건설기계 부문은 부산·울산 쪽이 조직이 잘 돼 있고, 토 목·건축 부문은 수도권 쪽이 조직이 잘 돼 있는데, 그런 쪽에 공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만 봐도 [정부의 탄압 의도를] 알 수 있죠. 부산·울산 건설 노동자들은 화 물연대 파업 때 연대 파업도 했었고요.

이전에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왜 윤 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노동조합이 안 가느냐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 3면으로 이어짐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

투쟁적인 곳부터 꺾어 노동개악 길 닦기

윤석열 정부는 취입 초부터 건설노조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5일 고용노동부는 채용 질서 집중 점검 사업을 벌인다고 건설노조와 건설 현장을 지목했다. 며칠 뒤 국무총리 한덕수는 새벽 인력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에게 '강성 노조' 문제를 확실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출범한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TF'가 건설노조 단속에 적극 활용됐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 이후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벌어졌다. ("200일 전쟁" 선포)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수년간 싸워서 임금을 인상하고 조직을 확대해 왔다.

예컨대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의 건설 전기 노동자들은 50일간 현장 투쟁, 거리 시위, 한전 본사 점거 등을 벌여 임금을 인상시키고 유급휴가를 얻어냈다.

이런 과정에서 조합원도 크게 늘었다. 건설노조 조합원은 2016년 2만 5000여 명에서 현재 8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윤석열이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공격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투쟁성을 약화시키고 싶어서다.

건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공사 현장 점거, 출입 통제(일종의 대체인력 저지), 태업 등의 방법으로 투쟁해 왔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런 투쟁 방식을 "폐법", "불법"이라며 매도하지만, 파업 효과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는 서구에서 "피케팅"이라고



건설노조를 잘 방어해야 정부의 더 큰 공격도 물리치기 쉬워진다

도 불리는 투쟁 방식으로, 국제 노동운동에서 역사가 깊은 전술이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는 다른 노조에 비해 점거 파업과 대체인력 저지 투쟁을 자주 벌여 왔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건설노조가 연대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은 노동개악 추진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의 노동개악안도 정의행위에 대체인력 투입 범위를 확대하고, 생산현장 점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 한다.

정부는 건설노조 같은 투쟁적인 부위를 공격해 노동자 투쟁 전반을 위축시키고, 파업 효과를 떨어트리려 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조직력이 좋은 부

문들(부산·울산 지역의 건설기계, 수도권 토목·건축)을 집중 공격한 것도 이 점을 보여 줬다.

그러나 현재 노동자들이 누리는 조건과 권리는 집단적 투쟁을 통해 쟁취하고 지켜 온 것이다. '법치' 운운하며 정당한 투쟁을 공격하는 정부에 맞서 투쟁과 연대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다.

분노

경찰은 1계급 특진을 내걸고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조합원들에 대해 마구 잡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노조 사무실 15곳을 압수수색했고, 16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1000여 명을 소환조사했다.

정부는 5월 11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른바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후속 대책'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격은 자신감을 충분히 갖고 벌이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와 미중 갈등 심화로 난처한 상황에서 물가 인상, 친미 외교 등에 대한 대중의 반감으로 지지율이 낮다.

많은 사람들이 건설노조 공격과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보며, 윤석열이 권좌에 남아 있는 한 노동자 등 서민층의 삶이 망가질 것이라 여기고 있다.

건설노조는 열사의 유지에 따라 건설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5월 16~17일 1박 2일 상경 파업 투쟁을 수만 명 규모로 벌일 예정이다.

이번 건설노조 투쟁이 확대된다면 정부의 노동개악 드라이브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고 윤석열 퇴진 운동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5월 6일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서 송찬흡 건설노조 부위원장이 16~17일 상경 파업 소식을 알리자, 집회 참가자들이 커다란 박수와 함성으로 응원을 보낸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퇴진 요구를 내걸었지만 그에 걸맞은 투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대 파업은 고사하고 연대 투쟁 강화를 위한 계획도 미흡하다.

윤석열의 건설노조 공격은 노동개악 추진을 위한 속죄양 삼기이자 전초전이다. 윤석열 정부가 열사의 죽음에도 냉혹하게 노동개악과 건설노조 공격을 벌이는 만큼 우리 편도 연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신정환

▶ 2면에서 이어짐

김승섭 경기도건설지부 조합원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 이후에,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서 일을 구하지 못하니까 알음알음 일을 구해 공사 현장에 들어가고 있어요. 노조를 통해서 현장에 들어가면 일당이 2만~3만 원 높아요. 단협을 체결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토요일 근무 시 할증 등 근로기준법이 어느 정도 지켜져요. 그런데 노조를 통하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이 다 무력화되고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월 100만~130만 원 정도 줄어 들었어요.

건설노조가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받지 않고 주 52시간만 일하겠다고 하자, 이번에 정부는 [태업이라며] 그렇게 일하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일은 기존대로 시키면서 월례비만 주지 않으니 사실상 임금을 반토막 낸 것입니다. 윤석열이야말로 공갈협박범 아닙니까? 왜 연장근무를 강요합니까?

사회를 바꾸고 열악한 건설 현장도 바뀌었다는 자부심이 있는데, 정부가 조폭·깡패 집단으로 몰고 주변에서 마치 그런 것처럼 말하니 자존심이 상하고 용납하기 힘든 것이죠. 양회동 열사도 윤석열은 안 되겠다고, 너무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인터뷰·정리 안우춘·이현주·임준형

※ 인터뷰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영국 대처 정부(1979~1990)의 노동운동 공격 살펴보기

대처를 알면 윤석열이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를 따라하려는 듯하다. 대처 정부가 노동운동을 패배시켜 신자유주의적 고통 전가에 이력저력 성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영국의 계급세력관계와 지금의 한국이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처를 따라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 노동계급의 의식과 조직은 불균등하고 다수가 전에 비해 수동화돼 있긴 하지만, 후퇴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더구나 반윤석열 정서가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이 노동 개악으로 발걸음을 떼려고 할 때마다 지지율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이 대처 정부의 노동정책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대처의 승리에도 우여곡절과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경험을 아는 것이 윤석열에 맞서 싸우는 노동운동 활동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대 투쟁 억제

마거릿 대처의 보수당은 1979년 총선에서 겨우 44퍼센트를 득표하고 집권했다. 그 직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1974~1979)가 지지자들의 기대를 배신한 데 따른 노동자 대중의 환멸 덕분이었다.

일각의 신화와 달리, 대처의 집권은 대중의 보수화의 결과가 아니었고, 대처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광범한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대처가 연임에 성공했지만, 보수당 득표율은 더 떨어졌다.

그래서, 대처가 노동운동을 제압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집권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다.

대처는 과거 보수당 정부(1970~1974)의 실패로부터 다음 두 가지를 교훈으로 삼았다.(대처 자신이 그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었다.)

‘노동자 투쟁을 제압해야만 신자유주의 개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 개악을 한꺼번에 추진한 것은 실수였다.’

그래서 대처의 노동 공격은 연대 투쟁 불법화, 순차적 개악, 각개격파를 특징으로 했다.

그럼으로써 전후 장기 호황기에 노동자들이 확보한 권리와 관행들을 폐지하고 계급 세력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광원노조 파업의 패배는 전혀 예정된 것이 아니었다

대처는 집권 첫해에는 제3자의 파업 피케팅에 제약을 가하고, 이에 관한 노조 간부의 면책특권을 폐지했다. ‘피케팅’은 파업 효과를 키우려고 대체인력 투입을 막는 집단행동을 가리키는 용어다. 지금 윤석열이 건설노조의 공사 현장 앞 집회나 점거, 출입 통제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피케팅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대처는 호황기의 투쟁들로 노동자들이 획득한 피케팅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 관행을 “법·질서”의 이름으로 공격했다.

이 공격이 성공하자 2년 뒤 대처는 쟁의의 쟁점을 제한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정치 투쟁(특히, 계급 일반의 연대 파업) 가능성을 억제하려는 시도였다.

온건한 노조 지도자들과 노동당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선호하지 않는 전투적 관행들을 금지하는 것에 열의 있게 반대하지 않았다.

대처에게 형편없는 야당이라는 운이 따랐던 것이다.

그렇게 다섯 차례에 걸쳐 노동법을 야금야금 개악한 결과, 피케팅과 연대 파업이 전면 불법화됐고, 노조 간부의 면책도 폐지됐다.

모든 파업은 비밀 우편 투표로만 결정할 수 있게 됐고, 노동조합원만 고용하는 클로즈드숍 제도가 폐지됐다. 개별 노동자가 노조 지침을 따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주의 명령권이 강화됐다.

이런 노동 개악은 고용 유연화, 민영화(사영화), 복지 삭감 등과 함께 추진됐다.

대처는 투쟁적인 노동조합들을 먼저 제압해 계급 세력관계를 역전시키고자

했다.

대처는 집권 초에는 광원노조, 인쇄노조 등 투쟁적인 노조들의 파업에 바로 양보했다. 아직 본격적인 전투를 치를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개격파

그러나 경제 회복(제한적이었음에도)을 배경으로 연임에 성공하자 전투적인 노조들에 대한 각개격파에 나섰다.

“모처럼 찾아온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비난해 노동자 투쟁을 고립시켰고, 개악한 법들을 활용해 “법·질서” 지키기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맨 먼저 타깃이 된 것은 인쇄노조였다. 인쇄노조가 영국 노총의 외면과 방해로 고립된 투쟁 끝에 패배하자, 대처는 1970년 보수당 정부를 무너트렸던 광원노조를 정조준했다.

대처는 비밀리에 석탄과 석유 등을 비축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한 뒤에 대대적인 광산 폐쇄와 광원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광원노조는 파업에 나섰다. 사회주의노동자당 같은 혁명적 좌파들이 연대를 건설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기층에서 다양한 연대가 조직됐지만, 전국 차원의 연대 투쟁은 조직되지 못했다. 영국 노총과 노동당은 파업을 진심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영국 노총은 연대 파업 계획을 취소했고, 노동당은 파업 피케팅을 비난했다.

대처의 개악이 조장한 부문주의에 감히고(심지어 광원노조 내에서조차 그랬다), 대처가 “법·질서”를 앞세워 압박한 것에 노동조합·노동당 지도자

들이 굴복한 탓이다.

광원노조는 꼬박 1년을 전투적으로 파업했지만 결국 굴복했다.

대처가 훗날 회고한 바에 따르면, 파업 막바지에 석탄 비축분이 바닥나면서 정부는 양보를 할지 말지를 고심하고 있었다.

패배가 예정된 것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 노동계급의 전반적 연대 행동, 즉 정치적 투쟁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노조와 노동당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그런(전면적) 연대 활동을 가로막았다.

연대 투쟁의 정치

윤석열은 지난해 6월 화물연대 파업에 양보했다가 12월 파업에 대해서는 보복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동조 파업을 한 건설노조를 상대로 곧바로 200일 간의 전쟁을 개시했다. 그리고는 건설노조가 투쟁으로 따낸 관행을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것은 대처의 공격 패턴을 떠올리게 한다.

윤석열은 경제 위기로 인한 기업주들의 이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계급 간 세력관계를 노동계급에 불리하게 바꾸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대처 정부의 사례에서 배울 가장 중요한 것은 계급적인(정치적인) 연대와 투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 부문에 대한 공격이나,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관행에 대한 공격을 방관하거나 수세적 대응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대처의 승리는 예정된 것이 아니었다. 노동조합과 노동당의 지도자들이 대처의 계급 전쟁에 맞서 전면전을 치르기를 회피했기 때문에 패배했던 것이다.

지금 한국 노동운동의 개혁주의 지도자들도 좀처럼 부문주의의 틀을 뛰어넘지 않고 있다. 이런 경향은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됐다. 개혁에 대한 기대로 수동성과 부문주의가 부추겨진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이 후퇴한 것은 아니고, 윤석열에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에, 대중 운동의 회복탄력성이 발휘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본지 독자들은 윤석열과 생계비 위기에 대한 노동 대중의 분노와 불만을 정치화해, 반윤석열 투쟁을 보편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김문성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군주제 반대 시위 탄압에서 드러난
세계적 국가 탄압 강화 추세

5월 6일 영국 국왕 대관식을 앞두고 런던 경찰은 군주제 폐지 시위 조직자들을 체포해 예의 그 명칭함을 드러냈다. 런던 경찰은 오명을 입은 기관이다. 영국 사회의 권력 핵심부에 속한 루이즈 케이시[보수당 정부의 사회복지 담당 관료 — 역자]조차 지난 3월에 낸 보고서에서 런던 경찰을 인종차별과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 부패가 체계적으로 만연한 곳으로 평가했다.

여론 조사에서는 군주제가 지지를 잃고 있다는 결과가 한결같이 나온다.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그렇다. 찰스 3세가 재위 기간 중 십중팔구 가장 큰 인기를 누렸을 그 때에[대관식 날 — 역자], 런던 경찰은 시위자들을 선제적으로 체포해 그에게 풍물을 튀겼다. 물론 경찰이 제멋대로 움직인 것은 아니다. 1829년 보수당 정부의 내무장관 로버트 필 준남작이 창설한 이래 런던 경찰은 언제나 중앙 정부의 핵심 억압 기구 구실을 했다.

현 내무장관이자 극우 데마고그[이민 정책에 매우 강경하다 — 역자]인 수엘라 브레이버먼은 시위할 권리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명했다. 이렇게 탄압이 강화되는 것은 영국만의 일이 아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경찰이 휘두르는 야만적인 폭력을 보라. 처음에는 2018~2019년 ‘노란 조끼 운동’이, 그후에는 연금 개악 반대 시위대와 환경 파괴 반대 시위대가 두들겨 맞았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들이 2020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에 대응해 시위대를 더 옥죄는 법률들을 도입했다. 얼마 전에는 테네시주 의회의 두 아프리카계 의원이 총기 폭력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잃었다. 현재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징후다.

미국 상황을 다룬 중요한 연구서인 《저항을 단속하기》(2021)에서 저자 폴 패서버트는 그가 말하는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의 발전 과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런 발전에 따라 경찰이 불균형한 무력을 동원하거나 과시하고, 갈수록 고급 군사 장비에 의존하고, 용의자 감시를 위해 통계 모델과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을 채택한 과정을 보여 준다.



위태로운 경제를 관리하고 저항을 억누르는 국가 권력의 기능이 세계 곳곳에서 강화되고 있다.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시위대를 막기 위해 배치된 경찰들

이런 탄압 수단들은 금융 자본주의와 대량 소비에 필요한 도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패서버트는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의 탄압 물결은 패서버트가 묘사한 과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와 금융의 불안정, 기후 변화, 제국주의적 경쟁 때문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조차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 조건들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재난 시대

시장이 자기조절 능력을 가졌다는 신자유주의 교리가 도그마에 불과하다는 오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국가 권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위태로운 경제를 관리하고, 파상공세처럼 닥쳐오는 비상사태들로 들끓는 대중의 불만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국가들이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맛보기로 보여 줬다고 나의 신간 《새로운 재난 시대》에서 강조한 바 있다. 팬데믹에 대응해 정부들은 막대한 차입으로 록다운 기간의 소득 붕괴를 막고 이동을 크게 제한했다. 팬데

믹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조치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들은 안전 조치와 감염 데이터 추적을 금세 거둬들였다. 이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 아마도 우리는 비슷한 조치에 직면할 것임을 뜻한다. 국가들은 또한 억압 능력을 한껏 더 키우기 시작했다. 영국에서는 “공중 소란”을 일으키는 시위를 겨냥한 새로운 집회·시위법에 이어, “혼란”을 예방할 권한을 경찰에 주어 공공 질서법이 서둘러 의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대관식 때 경찰이 그토록 대답했던 이유다.

주류 정치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방과 중국·러시아의 지정학적 경쟁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로 포장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있다. 냉전이 절정에 달했던 1950년대와 마찬가지로 어느 블록도 내부 불만과 저항을 용인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 걸린 판돈은 매우 크다. 현 체제가 새로운 재난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가 낳은 고통과 핵전쟁의 위험 앞에서 우리는 저항할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1980년대 초, 흔히 말하는 ‘신냉전’이 일어나 미국과 소련이 핵 전쟁을 벌일 위험이 어쩌면 어느 때보다도 컸던 적이 있었다.

당시 탁월한 급진적 역사가 에드워드 톰슨은 《반혁의 논리》(일월서각, 1985)라는 책을 발행하고, 핵무기 철폐를 위한 대중 운동을 유럽 전역에서 일으켜 서로 경쟁하는 강대국들을 압박하자고 했다. 바로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 책의 영어 원제목처럼 — 역자] 저항해서 생존해야 한다.

번역 이원웅

출처 Alex Callinicos, ‘State clampdown is wider than royal protests’ (2023. 5. 9)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 구속 기소

민주노총은 보안법 희생자들을 지켜줘야 한다

김인식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두루 알다시피 5월 10일 검찰(수원지검 공공수사부)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직 간부 4인을 구속 기소했다. 그들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보안법 사건이 그렇듯이)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자행된 윤석열 정부의 마녀사냥이다.

그 노조 활동가 4인 기소는 검찰이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1년에 바친 선물이다. 윤석열은 지난 3월 민주노총 간부들의 간첩 혐의가 많이 포착됐다는 수사 내용을 거론하며 대공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강화를 핵심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윤석열의 주안점은 한미일 삼국의 안보 협력 강화였다.

그와 동시에,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주로 친북 좌파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 특히 간첩 사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북한 위협”을 가까이에서 실감하게 하는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공격은 사상·표현의 자유라는 핵심적인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합의상 친북 활동가들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윤석열은 안보를 강화해야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북한과 ‘내통’한 사람들의 민주적 권리는 간단히 무시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도 하기 전에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렸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윤석열이 입만 열면 외치는 법치 민주주의의 원칙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다.

측면 지원으로 우파 언론은 재판이



보안법 공격은 친북 활동가뿐 아니라 좌파 운동 전체를 겨냥한다. 올해 1월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국정원과 경찰

열리기도 전에 보안법 피해자들을 ‘간첩’으로 단죄했다.

검찰은 관련 노조 활동가들이 북한 공작원과 처음 상견할 때 본인 인지 표지를 제시한 것을 두고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간첩 노조?”

검찰은 역대 보안법 사건 중 최대 규모인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다고 했다. 거창한 발표에 비해 실 내용은 대단한 게 없다.

실체가 불분명하거나(주요 국가기관 인물 포섭하라), 부풀려져 있거나(민주노총 조종 및 장악 시도), 북한의 지령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들이다(이태원 참사나 화물연대 파업 등 민주노총을 정치투쟁 선동에 동원하라).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이번 구속 기소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5월 10일 YTN이 “민주노총은 일부 조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록 민주노총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그 내부에 기회주의적인 자세가 만만찮음을 짐작케 한다. 아마 우익들이 민주노총을 “간첩 노조”라고 비난하는 것을 의식한 언론 플레이였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을 “노동운동을 빙자한 간첩단이 암약하는 근거지”(당대표 김기현), “북한 대남공작의 지부”(원내대표 윤재옥)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간첩 노조”라니, 논리의 비약이 한심한 수준이다.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맞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정견과 크게 관계없이 모여서 만드는 방어진 조직이 노동조합이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국민의힘 후보를 찍는 사람부터 자본주의를 전복하길 바라는 혁명가까지 정치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가입한다.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로(비록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정치조직들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다른 노동조합보다는 조금 많겠지만, 어쨌든 이들은 소수다).

물론 북한을 남한보다 낫다고 여기는 조합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이런 친북 사상을 가진 노동조합원들을 숙아 내려 할 때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다음의 유명한 경구를 떠올려야 한다.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를 위해 한사코 싸우겠다.”

볼테르의 전기 작가가 볼테르의 신념을 요약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렇다: 사상의 차이는 참을 수 있으나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참을 수 없다. 진실

이니, 정의니 하는 말들이 사라진 이 시대에 특히 새겨야 할 원칙이다.

노동자연대가 한결같이 취해 온 입장이기도 하다. 노동자연대는 북한 사회가 사회주의이기는커녕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대중을 억압하는 자본주의의 변형태일 뿐이며,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에 의해 전복돼야 한다고 언제나 주장해 왔다.

이런 기본적 입장에 따라 우리는 북한 사회의 진정한 성격을 놓고 친북 좌파 활동가들과 의견을 달리해 왔다.

그러나 국가가 친북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결같이 반대했다. 그들은 북한 관료(북한 사회의 지배계급)의 일부가 아니라 남한 피억압자 운동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일부 좌파들은 국가보안법은 반대하지만 북한 국가를 지원하는 간첩 행위는 방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친북 활동가가 누군가를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일관되게 실천에 옮기려 했다면 그 행위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다.

민주노총이 보안법 마녀사냥 희생자들을 방어하고 나서면 윤석열의 보안법 공격 반대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보안법 반대 운동에 이름이나 올리고 돈 좀 대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자기 사건에 구체적인 저항을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회피하면 우익들은 그다음에는 민주노총이 만들겠다는 ‘진보연합당’을 두고도 ‘간첩당’이니, ‘친북 정당’이니 하며 물어뜯을 것이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윤석열 퇴진 운동의 앞날과 노동운동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국제연락간사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래 대통령 퇴진 운동은 사실 모든 정부 때 있었다. 그러므로 윤석열 퇴진 요구를 반대하기까지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개혁주의자들은 있을 법한 그런 상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전두환의 후계자였던 노태우를 끌어내리려 했던 운동은 논외로 하자. 노태우 정부하에서 벌어진 운동은 모두 노태우 퇴진 요구를 당연한 걸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영삼도, 김대중도, 심지어 노무현도 퇴진을 촉구 받았다.

김영삼은 민주노총의 전국적 파업 몇 개월 뒤인 1997년 5월경 한총련 대학생들의 광범한 항의 시위를 통해 퇴진을 촉구 받았다.

한총련의 김영삼 퇴진 운동이 한창이던 그해 6월 초 한 청년이 보안경찰의 첩자로 의심받아 한총련 간부들의 폭행으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김영삼 퇴진 투쟁은 정부의 맹렬한 반격을 받고 실패했다.

당시에 필자는 정부와 언론의 광포한 공격에 맞서 한총련 학생들을 변호하는 글을 썼다. (최일봉, '마르크스주의자는 폭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1997. 07. 03.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사람을 폭행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도덕적 공황 사태를 추수해선 안 되었다. (또한 같은 필자, '추수주의란 무엇인가?', 《노동자 연대》 제225호, 2017. 10. 18.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김대중은 2001년 3월경 노동운동에



윤석열 퇴진 운동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 기반을 얻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의해 퇴진을 촉구 받았다. 3월 31일 열린 민중대회는 “김대중 퇴진! 미국 반대!”를 구호로 내걸었다.

김대중 퇴진 운동은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을 지지하던 민족 자주화 운동가들의 외면으로 곧 한계에 부딪혔다. 특히, 2001년 7월 민주노총 전국 파업이 사전에 취소돼 퇴진 운동의 동력은 꺾였다.

노무현은 이라크 전쟁 파병 직전인 2004년 7월경 파병 반대 운동 내의 급진적 평화주의 경향에 의해 퇴진을 촉구 받았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

단의 목소리가 가장 잘 알려졌다. 우리 단체도 거기에 보탬다. 그해 7월 9일치 논설을 읽어 보면 당시의 맥락을 알 수 있다. (김하영, '파병 반대 운동 내 노무현 퇴진 논쟁에 붙여', 2004. 07. 09. 《다함께》 제35호,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노무현 퇴진 요구는 한미FTA 반대 운동이 한창이던 2007년 4월에도 외쳐졌다. 또, 그해 6월에도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항의해 노무현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007년은 노무현에 대한 환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래
대통령 퇴진 운동은
사실 모든 정부 때 있었다.

멸이 광범한 것만큼 변화에 대한 희망과 대중의 사기도 광범하게 실추한 때였다. 그래서 노무현 퇴진 요구는 분노의 외침이었던 것만큼 자신감은 뒷받침되지 못했다.

2008년 촛불 운동

이명박 퇴진 구호가 처음 외쳐졌던 때는 바로 그의 취임 3개월 남짓밖에 안 되던 2008년 6월 초순이었다. 당시는 촛불 운동이 6월 10일 1백만 명 집회 참가로 정점을 향하던 때였다. 그때도 우리 단체는 퇴진 외침에 동참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주도했다.

그러나 6월 8일, 전임 대통령 노무현이 “정권 퇴진은 헌정 질서에 어긋나”고 “촛불 시위 청와대 행진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이명박 퇴진 요구를 정면 반대했다.

당시 일반적인 촛불 운동 참가자들은 너무 젊고 정치적 경험이 부족해 이런 묵직한 견제구를 맞받아치지 못하고 회피했다.

당시 촛불 운동 지도부도 이명박 퇴진 문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청계광장 토론 들만 조직한 채 이도 저도 못 하고 우왕좌왕하다가 3주가량 시간을 까먹었다.

그 사이에 전열을 정비한 이명박은 7월 초 반격에 나서 운동은 속절없이 뒤로 밀렸다. 당시 운동 지도부인 국민회의에 참석하던 우리 측 간사는 너무 분해 눈시울을 적셨다.

그해 연말 종각 앞에서 열린 타종 행사에 참가한 10만 군중도 “이명박 퇴진”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반이명박 정서는 그의 재임 기간 내내 변화 없음 대중 정서의 일부였고 기본이었다. 그리고 그의 정부에 항의해 일어난 운동

들이 적절하다 싶으면 수시로 꺼내드는 구호였다.

특히 2011년은 2008년 이후 일어난 운동들이 가장 높은 수위에 도달하던 때였다. 6월경 한대련 학생들의 시위는 반값 등록금 약속을 쟁취했고, 8월에는 진보 진영이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 주민투표에서 오세훈을 패퇴시켰고, 가을에는 희망버스가 한진중공업에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2012년 4월 총선에서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승리하고 한명숙 전 총리의 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이 패배하면서, 그해 말 대선 전망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설상가상으로 그해 5월부터

9월까지 통합진보당이 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선거 의혹으로 흑심한 내용과 분당 사태를 겪었다.

2008~09년 경제 공황과 그 여파 속에서 당시 좌파는 우파 정부의 등장을 이명박 한 번으로 끝낼 것으로 예상하면서 변화가 진보를 향해 다시 전진하리라고 암묵적으로 낙관하고 있는 듯했다. 사실상 경제 위기시 노동계급 자동 급진화론이라는 단선적인 진화적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2012년 총선 패배,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 마침내 연말 대선 패배까지 겹치자 2013년에는 사기 저하가 광범해졌다.

▶ 8면으로 이어짐

▶ 7면에서 이어짐

2016~17년 박근혜 퇴진 운동

이제 박근혜 퇴진 운동 얘기로 나아가 보자. 사실 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기 1년 전에 이미 대중적인 박근혜 퇴진 구호가 터져나왔다. 바로 2015년 12월 19일 제3차 민중총궐기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분노와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분노가 당시 시위의 유력한 정서였는데, 집회 주최측 자신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아가자”는 결의에 찬 말로 집회를 마쳤다.

1년 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정부 퇴진 투쟁과 달리 성공한 투쟁이었다. 몇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단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광범한 노동 대중의 참가였다. 이 점은 2008년 촛불 운동과 비교해 보면 매우 두드러진다.

2008년 촛불 운동은 처음에 청소년들이 발의했다. 그들은 교육 억압 반대와 언론 자유 제약 반대 등도 함께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당시 운동 지도부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국민회의는 연대체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요구를 특별히 부각시켰다. 단일 쟁점을 둘러싸고 운동을 전개시키려 애썼던 것이다. 반면 국민회의 안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우리 단체는 신자유주의와 이명박을 반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에 단연 가장 큰 차이점은 노동계급을 동참시키는 문제였다. 당시 촛불 집회의 비교적 초기 참가자들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전반부에 이르는 매우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당시에 자율적 사회운동 지향성이 강해 조직 노동계급과 레닌주의자들인 우리 단체에 대한 경계심 또는 적개심이 강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였다. 특히, 민주노총은 전 조합원의 참가를 명령하고 강조하기보다는, 그저 참가를 원하는 조합원은 시민 개개인으로서 참가하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단순한 행사 공지 수준으로 집회 소식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6월 10일 촛불 집회에 1백만 명이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계급 사람들이 참가자의 대부분을 이루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지도자들이 자율적 사회운동 정서에 도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조합원들이 노동자임을 수줍어하거나 부끄러워하게 내버려 두는 한에서는 노동자들의 참가에도 한계가 지워지기 마련이었다.

사실 이명박 퇴진 요구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노동계급의 조직적 참가를 둘러싼 논쟁에 비하면 부차적이었다.

2008년과 대조적으로 2016년의 촛불 운동은 노동계급의 참가가 대거 이뤄졌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소추 직전인 2016년 12월 초순경 집회 참가자는 230만 명으로 늘어났다.

물론 2011년 1월 25일 이집트에서 독재자 무바라크를 몰아낸 타흐리르 광장 점거자 1500만 명에 비하면 이 규모는 크게 못 미친다. 이집트 인구가 한국의 두 배임을 고려해도 한참 작다. 이집트에서처럼 항의가 혁명으로 발전하기 전에 한국 지배계급은 박근혜를 탄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퇴진 운동이 혁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사실 없었다. 12월 초순까지 운동을 지도한 노동조합(민주노총) 지도자들이 이후로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개혁주의 정치인들에게 지도권을 넘겨 줬기 때문이다.



2016~2017 촛불운동이 박근혜를 끌어내렸어도 흔히들 주장하는 것과 달리 혁명이 아니었다

박근혜 퇴진 투쟁의 실종된 고리

그러나 노동계급의 기층에서도 노조 지도층과 개혁주의 정치인들의 지도를 넘어 운동을 온전히 전면화·보편화한다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려면 광범한 노동 대중의 경제 투쟁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이 경제 투쟁들이 정치적 투쟁으로 수렴되고, 이것이 다시 경제 투쟁으로 다발성이 되고, 이것이 다시 정치 투쟁으로 수렴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말한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동반 상승효과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2016년 말 민주노총과 정의당의 지도자들은 민주당과 협력해서 그러한 동반 상승효과가 나기 전에 탄핵이라는 합법 절차를 밟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성공했다(12월 초순경 그들은 철도 파업을 종료시킴).

노동자 투쟁은 정치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 둘 다와 씨름할 때 고양되고 전진하는 것이다.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단지 반부패 문제와 민주 개혁 문제 갖고만 씨름한 일반 노동 대중이 박근혜 정부 조기 퇴진에 만족하려 했던 것은 당연하다. 사람들의 관념들과 가능성들은 그런 고양되고 전진하는 투쟁 중에 발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노동자들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넘어 더이상의 무엇을 바랄 수 있었을까.

2016~17년 촛불 운동이 박근혜를 끌

어내렸어도 촛불 운동은 (흔히들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혁명이 아니었다. 그 운동이 성공을 거두며 조성한 상황 자체가 혁명적 상황이 아니었다. 혁명적 상황이라면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상적 통치 기구 일부가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그 통제력이 체제 도전 세력에게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져야 한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성공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앞으로도 박근혜 퇴진 운동과 비슷한 성공적인 대통령 퇴진 운동이 일어날까? 더 구체적으로 말해, 윤석열 퇴진 촛불 운동은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처럼 커져서 박근혜처럼 윤석열도 퇴진시킬 수 있을까?

물론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핵심적인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 물음들은 이런 것들이다:

윤석열 퇴진의 결과로 또다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텐데, 그래 봤자 얼마 전 민주당 정부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온건 좌파측의 독립적이지 못한 노선이 포기될 공산이 과연 있는가? 노동자연대 같은 급진 좌파는 너무 미약해서 사태에 별 영향을 못 미치지 않겠는가? 그리고 노동계급이 대통령 퇴진 운동에 동참한다 해도 노동조합인 민주노총의 개혁주의적 관료층의 지도하에 있을 텐데, 그들은 또다시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의 개혁주의 정치인들에게 운동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는가?



2008년과 달리 박근혜 퇴진 운동에는 노동계급이 대거 참여했다



지금 한국 지배계급은 윤석열이 박근혜처럼 무기력하게 물러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혁명적 좌파는 이 운동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관여해야 한다

혁명적 관점이 분석과 전망의 출발점이 되기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변의 전제가 돼야 할 근본적인 논점이 있다. 그것은 기존 자본주의 국가 기구들이 해체되지 않으면 지배계급은 조만간 반격을 개시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퇴진 운동을 포함해 자본주의 국가 기구들을 남겨둔 항쟁은 모두 개혁과 반동이 뒤죽박죽 섞인 시기로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 민주당이 다시 정부로 들어가든, 정의당이 민주당과 연립해서 집권하든, 좌파들이 집권하든, 아무튼 기존 자본주의 국가가 남아 있는 한은 지배계급은 반드시 반격한다.

지난 7년 새 그리스 시리자, 영국 노동당 제러미 코빈, 스페인 포데모스의 경험 이틀 보여 준다. 박근혜 퇴진 촛불의 성공으로 대중이 얻은 이득이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것도 이 문제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경제 위기뿐 아니라 지정학적 위기도 하도 심각해서 한국 지배계급은 박근혜 제거하듯이 쉽게 윤석열이나 다른 보수 대통령을 제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박근혜 퇴진 운동 중에 기무사 주도로 군사 쿠데타를 모의했던 것을 이제는 아예 실행할지도 모를 일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긴 것은 한반도 전쟁 위험에 대비하는 것임과 동시에, 탄핵당하는 박근혜 같은 무기력을 재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군사 쿠데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짧게라도 혁명적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 중에 일어난 코르닐로프의 군사 쿠데타와 달리 사실 대부분의 군사 쿠데타는 급진 좌파에게 좋은 기회

를 제공하지 못했다. 1974~75년 포르투갈에서는 군사 쿠데타로 조성된 혁명적 상황 속에서 개혁주의자들인 사회당과 공산당이 체제를 안정화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비록 혁명적 상황은 아니었어도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프랑코 사망 직후인 1976~78년 스페인에서도 사회당과 공산당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로 지배계급의 정당들에게 약속하고 타협했다.

이런 일은 독재 정부들이 정리되던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소위 '민주주의 이행' 중에도 똑같이 일어났다.

또한 1989년 말 인종분리 제도를 정리하기로 한 남아공에서도 공산당과 아프리카민족회의 ANC는 백인 지배계급과 점진적 안정화 합의를 했다.

무릇 대중 운동 안에서는 타협하는 게 더 좋으냐를 놓고 토론이 있게 마련이다. 운동의 수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지배자들과 합의 보는 것을 둘러싸고 말이다. 그런 일을 겪게 되면서 대중 운동은 자체의 보수층을 만들어 내는 법이다. 이런 일은 결코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지배자들은 계속 운동의 약점을 찾고 운동 안에서 협력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혁명적 좌파가 직접 나서서 분명하고도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계속 그 목소리를 개발해야 한다. 운동에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해서는 운동 안에서 타협적 경향이 더욱 발전하고 때로 배신적 타협으로 운동이 전진하지 못하고 진로를 이탈하게 된다.

맺음말: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상호작용을 향해

윤석열 퇴진 운동은 이전의 여느 대통령 퇴진 운동에 비해 실질적인 세력을 밀천으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표방한 목표를 이루려면 노동계급 기반을 얻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 기반을 민주노총이 제공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노동계급 사람들이 스스로 제공하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또,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참가하느냐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거의 12년 전 아랍 혁명의 발단도 튀니지에서는 노동조합이 주도했고, 이집트에서는 청년들이 주도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튀니지나 이집트나 오십보 백 보였다. 둘 다 혁명 시작 후 2년 남짓 만에 반동에 부딪혔고, 이집트가 좀 더 빨리 반동이 강화됐고, 튀니지는 반동이 좀 더디게 질질 끌었을 뿐이다.

노동조합이 참가하든 안 하든, 노조 지도자들이 주도하든 안 하든 본질적

▶ 10면으로 이어짐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f 노동자 연대

@wspaper

wpaper_org

노동자 연대 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ISSN 2005-8217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인필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9 772005 821003

19

주택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번 전세 사기 대란은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했다가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집값이 치솟을 때는 서민층의 일부도 대출을 늘려 집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벼락 거지’를 면해 보려고 집을 사지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늘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하우스 푸어’가 되는 식이다.

상당수 서민들은 최근 집값 급등기에 전세 대출을 늘렸다. 오른 전세값을 대거나, 월세보다 대출 이자가 싸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대출 이자가 올라 허리를 졸라매야 하고, 또 보증금을 때일까 전전긍긍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세는 줄고 월세 가격이 올라 생계비 문제가 커지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오늘날 주택 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사람의 삶에서 필수적인 주거 조차 시장의 논리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는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은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끊임없이 주택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주택 경기는 자본주의 경제 상태와 연동해 움직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의 일자리와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경기가 좋을 때는 임금이 좀 오를 수 있지만, 치솟는 집값을 따라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기가 나쁠 때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일자리와 소득도 줄어들어 서민층이 집을 살 여유가 없다.

그래서 서민층 상당수가 내 집 마련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본

주의에서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 ‘2019년도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자가점유율(자기 소유 주택에서 살고 있는 비율)은 58퍼센트밖에 안 된다. 서울은 더 심각해서 42.7퍼센트밖에 안 된다.

결국 자본주의에서 주택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 논리에서 벗어난 주택을 늘리는 데 있다. 즉, 양질의 영구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만 주택난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윤을 우선하는 자본주의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복지 정책이 공격받기 일쑤이다.

한국은 공공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나라다. 서구 일부 국가에서는 전후 복지 확충으로 한때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기도 했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에

공공 주택이 대거 매각되며 주거 복지가 후퇴했다.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윤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우선해 생산이 이뤄지는 사회로 바꾸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증대한 생산력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잠재력을 만들어 냈다. 이 능력이 합리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부유층이 소유한 집을 적절히 나누고, 필요에 맞춰 주택을 지어 나눠주면 주택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윤 논리 때문에 이런 일이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강동훈

※ 전세 사기 관련 기사는 12~13면을 보시오.



양질의 영구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라 시장 논리 속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주택난이 벌어진다

▶ 9면에서 이어짐

인 문제는 정치 투쟁이 광범한 경제 투쟁들과 연관되는 것이다. 정부의 위기가 심각해질 때마다 운동 안에서 벌어지는 논쟁, 즉 대통령 퇴진이나, 대통령 사과나, 국무총리 경질이나, 행안부 장관 경질이나 등이 핵심 쟁점이라기보다는 노동자들의 대중 파업과 연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폴란드계 독일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는 혁명이나 그에 조금 못 미치는

대규모 투쟁을 거리 집회 · 시위 · 행진 · 소요 · 폭동 등의 견지에서만 생각하는 것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사실 2015년 말 민중총궐기 당시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비롯한 총궐기 조직자들은 이런 식으로 사고하며 대중 파업을 회피했다.

그저 노동조합 지도자가 정치 집회 연단에 노동조합 대표로 올라 연설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노동계급 사람들이 대거 집회에 참가할 뿐

아니라 그들이 자기 사용자에게 맞선 경제 투쟁을 하도록 고무돼야 한다. 기층에서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이 연관되며 상호작용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룩셈부르크는 대중 파업을 사회민주당이나 노동조합 지도부가 편리한 때 자기 뜻대로 지시해서 일으키는 단 한 번의 조치로 취급하는 것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말하자면 흔히 “뺑파업”으로 끝나는 관료적 “총파업”을 비판한 것이다.

룩셈부르크의 다음 말로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상호작용을 요약하겠다. “경제 투쟁은 하나의 정치적 중심에서 다른 정치적 중심으로 동력을 전하는 전달자이고, 정치 투쟁은 경제 투쟁의 투쟁력을 높이고 투쟁을 성장케 해주는 정치적으로 주는 비료다.”

그러므로 본지 지지자들은 윤석열 퇴진 운동 지지자들 사이에서, 또 경제 투쟁 속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급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둘을 서로 잇는 다리가 돼야 한다.

쿠팡 택배 노동자들, 노조 설립!

상시적 부당 해고 위협에 반기를 든다

쿠팡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했다. 지난 4월 24일 전국택배노조에 소속된 쿠팡 택배 성남 분당, 서울 강남, 고양 일산 지회가 한날 동시에 창립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사측의 보복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다.

노조 설립을 준비 중인 지역이 몇 곳 더 있다.

이번에 노조를 설립한 택배 노동자들은 쿠팡이 2021년 설립한 택배 자회사 쿠팡CLS(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에 소속돼 있다.

그동안 쿠팡은 배송 인력을 직고용해 노동자들의 조건이 좋다고 내세워왔다. 그러나 사측의 선전과 달리 노동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이제 쿠팡에 직고용된 노동자들(‘쿠팡친구’, 구 ‘쿠팡맨’)은 10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80퍼센트는 다른 택배사처럼 쿠팡CLS가 간접 고용한 택배 노동자들(킥플렉스)이다. 사실상 쿠팡 배송의 대부분은 킥플렉스가 맡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1톤 트럭을 보유한 배송 기사들로, 쿠팡에게 건당 수수료를 받고 배송을 위탁받는다.

쿠팡은 비용 절감을 위해 직고용을 대폭 줄이고, 택배 자회사를 설립했다.

쿠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3회 연속 분기당 1000억 원 넘는 흑자를 냈다. ‘새벽 배송’, ‘로켓 배송’ 등 속도전에 내몰린 택배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 덕분이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얼마 전 택배 과로사 대책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실시한 ‘쿠팡 노동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쿠팡 택배 노동자들은 배달 구역 회수(클렌징) 위협에 시달리고, 장시간 노동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상시적으로 과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

무엇보다 배달 구역 회수 위협에 큰 불만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에게 배달 구역 배정은 일감과 직결된다. 클렌징은 수행률(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일감을 빼앗겠다는 것이다. 화장을 지우듯 실적 낮은 택배 노동자를 ‘깨끗하게’ 청소하겠다는 말이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 노동자들이 배달 구역을 잃으면 수입이 줄어들고, 아예 일을 못하게 될 수 있다. 쿠팡 택배 노동자들은 “클렌징은 부당 해고”라며 분노한다.



사측이 수천 억 원의 이윤 잔치를 벌이는 동안, 쿠팡 택배 노동자들은 고된 노동으로 내몰려 왔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에도 계약 기간 중 사전 합의 없이 ‘담당 구역’을 택배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쿠팡CLS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클렌징

배달 구역 회수 압박은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 과로, 산재로 내몰고 있다.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쿠팡 택배 노동자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무려 10시간이다. 그 이상 근무한다고 답변한 사람도 응답자의 31.4퍼센트에 달한다. 반면, 하루 휴게 시간은 평균 18분에 불과하다. 노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배달 업무 수행률이 떨어지면 클렌징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많은 동료들이 시간에 쫓기며 장시간 노동과 관절 부상 등에 시달리고 있다.

“아침 7시까지 배송하라고 지시받지만, 물건을 적재하는 시간이 새벽 4시 반~5시쯤이다. 물건 정리 시간,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어떻게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겠나.”

쿠팡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싸우는 이유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이다.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 성과로 노동시간 단축, 고용 안정, 대리점주의 횡포 금지, 분류 작업 인원 확충 등을 담은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택배 사용자들은 번번이 약속을 어겨 왔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도 계속됐다.

쿠팡CLS는 한술 더 떠 사회적 합의 당시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

쿠팡 사측이 대리점과 택배 노동자 사이의 계약 문제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최근 쿠팡CLS가 대리점과 맺은 계약서가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반품·프레쉬백(재활용 가능한 배달 보냉 가방) 회수율 90퍼센트, 주말·공휴일 배송 업무 월평균 수행률 70퍼센트, 명절 당일 배송업무 수행 기사 비율 40퍼센트”가 적시돼 있다. 쿠팡이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

대리점은 택배 노동자들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강요한다. 이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은 클렌징 압박 속에 장시간 노동, 과로, 산재 위험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쿠팡 택배 노동자들이 이런 가혹한 계약을 거부하면 바로 해고될 수 있다. 울산 택신 대리점에서 사측이 내놓은

계약서를 거부한 택배 노동자 7명이 문자로 해고됐다. 이후 이들은 노조를 결성했다.

마녀사냥

쿠팡 사측을 두둔하는 <조선일보> 등 친사용자 언론들은 쿠팡 택배 노동자들을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공격했듯이 말이다.

그러나 진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쿠팡 사측과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다.

쿠팡 택배 노동자들이 캠프(물류 터미널)에서 집회를 열면, 쿠팡 캠프 직원들과 쿠팡이 고용한 용역들이 집회에 난입해 방해했다. 경찰은 항의한 조합원들을 등 뒤로 수갑을 채워 연행해 갔다. 한 여성 조합원이 항의하다 밀쳐져 구급차로 호송되는 일도 있었다.

택배 노동자들은 경찰이 ‘쿠팡의 용역’ 노릇을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연일 ‘폭행’ 주범으로 지목해 마녀사냥하고 있는 원영부 택배노조 경기지부장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를 다쳐 현재 입원해 있다. 상급단체 간부인 그는 현장 조합원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캠프에 들어가려다 쿠팡 관리자 십여 명에게 둘러싸여 밀려났다. 그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는데 <조선일보>는 이 장면만을 부각해 폭행으로 몰아갔다.

쿠팡 사측은 노조 분당지회장의 현장 출입마저 막아섰다. 현재 분당지회장과 다른 한 조합원은 근무 시간에도 현장에 출입을 못하고 있다. 일도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해고 수순이다. 쿠팡 조합원들은 사측과 경찰이 짜고 ‘경찰 연행 - 출입 제한 - 해고’를 자행하는 것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쿠팡 사측이 강경하게 나오는 배경에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유통업계와 택배업계의 경쟁이 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을 억눌러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건폭’ 운운하며 건설노조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도 사측에 자신감을 줬을 것이다.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과 노동조건 개선 투쟁은 정당하다. 더 많은 지역의 쿠팡 택배 노동자들이 노조 건설과 투쟁에 나서기를 바란다. 이 투쟁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자.

안우춘

피해자 선별, 보증금 지원 없음

전세 사기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윤석열 정부

국회 안 타협 말고 국회 밖 투쟁을 우선해야

5월 8일 서울시 양천구에서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2월과 4월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자살한 데 이어 네 번째 희생자다.

그는 전세 보증금 3억 원 중 2억 4000만 원을 대출로 마련했다고 한다.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날리고 빚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걱정과 스트레스 속에 대출 이자, 소송 비용 등 마련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다 건강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전세 사기·강통전세 피해자들은 이토록 절박한데 정부·여당은 계속해서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강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이하 피해자 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5월 8일부터 국회 앞 농성장을 차리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5월 8일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안은] 결국엔 피해자들이 다 빚에, 빚에, 빚을 떠안고 평생 그걸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빛 좋은 개살구 지원책을 통과시키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들을 속이는 일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세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안에는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구제해 주는 내용은 전혀 없다.

정부의 대책은 대출을 해 줄 테니 경매를 통해 집을 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경매에서 먼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대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안대로라면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인 근저당이 있는 경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대부분 잃는 처지가 될 것이다.

세입자보다 앞서는 근저당이 없어 경매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이미 전셋값보다 집값이 떨어진 강통전세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올해 진행된 주택 경매의 낙찰가는 감정가의 50~60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세입자들은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 원치 않는 집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기존에 받았던



더는 외면 말고 정부가 책임져라 5월 8일부터 국회 앞 농성장을 차린 전세사기·강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

전세자금대출을 고스란히 갚아야 하고 집주인의 밀린 세금까지 떠안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일부 세금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줬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입주하기 전에 생긴 세금은 피해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피해자가 경매를 원하지 않고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LH가 집을 낙찰받아 피해자가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부는 피해자들의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마저도 지원 대상이 되려면 까다로운 선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전세 사기와 강통전세 피해자를 나누고, 다수의 집단 피해와 소규모 피해를 나누고, 보증금 액수 등을 따져 피해자를 골라내겠다고 한다. 정부의 관심은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 지원 대상자를 줄이는 데 있다. 피해자들이 정부의 안을 “피해자 걸러 내기”라며 비판하는 이유다.

전원·전액 구제하라

정부·여당은 “혈세 낭비”라거나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세 보증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지 개인들 간의 사기가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다. 이제까지 정부들은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을 쓰면서 사실상 부동산 투기 붐을 조장해 왔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임

대사업자 제도를 육성하며 다주택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자 갭 투자를 통해 많은 주택을 보유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러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자 세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떠넘겨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것인 만큼 마땅히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기꾼이 저지른 전세 사기 피해자 이든 집값 하락으로 인한 강통전세 피해자든, 보증금이 크든 작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생긴 모든 피해자들을 구분하지 말고 지원해야 한다.

야당들은 공공기관이 나서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먼저 보상해 주고, 추후에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자는 안을 내 왔다.(선 구제, 후 회수) 물론 이는 정부의 안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보상해 주는 전세 보증금의 액수를 채권 기관의 심사를 통해 할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안이다.

정의당은 전세 보증금의 50퍼센트 이상은 정부가 보전에 줘야 한다며 민주당보다는 나은 안을 냈지만, 이조차 피해자들의 손해가 결코 적지 않다.

그런데 얼마 전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민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해 정부·여당이 선 구제, 후 회수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대상 확대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는 전세금을 한 톨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전세금 50퍼센트 보전안보다 후퇴한 방안이다.

국회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등과의 협상에 치중하다 보니 진보 정당들도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후퇴가 보증금을 다 떼이게 생긴 세입자들에게 일부라도 지원하자는 선한 의도일지라도, 이런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이 합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큰 손실을 봐야 하는 많은 피해자들이 고립돼 향후 목소리를 내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현재 나온 안들을 조율해 5월 25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좋지 못한 합의를 하기보다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국회 안에서 협상을 우선하며 요구안을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국회 밖 투쟁을 우선해야 한다.

전선영

▶ 추천 동영상

전세 사기와 부동산 정책

전세 사기 명석 짚아 준 정부
국회 타협 말고 정부에 보증금 반환 책임 물어야

you.tube/UxY17v53PTI

독자 투고

대정부 투쟁으로 부도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 보장받은 경험

현재 전세 피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벌써 네 분이나 목숨을 잃었다. 자신들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들어간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며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됐는데 정부도 몰라라 하면서 생긴 일이다.

나는 2000년대 초반 지방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았다. 임차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에 비해 저렴해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TV에서 황당한 뉴스를 보게 됐다. 내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부도 났고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임차 보증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나는 다급하게 여기 저기 알아봤지만 돌아온 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이러다가 보증금 못 돌려 받는 것 아닌가?’ ‘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곳에 들어와서 이러지?’ 하는 자책을 하기도 했고, 개인이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도 했다.

그러던 와중에 내가 살던 부도 임대아파트에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회의가 있다는 공고를 보고 참가했다.

그 회의에서 나와 같이 ‘내 탓이요’ 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또 이런 사태가 우리 아파트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였다는 것,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이미 전국적인 대책위가 구성돼 꽤 열심히 싸우고 있었다는 점도 알게 됐다.

이후 나는 내가 살던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사무국장을 맡게 됐고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 집회, 과천 정부청사, 전국대책위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지금의 전세 피해의 문제처럼 부도 임대아파트도 정부 정책의 산물이었다.

애초 공공임대아파트는 공공(가령 LH 등 공기업)이 지어서 임대해 주는 영구 임대아파트였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가 민간에게까지 사업 규제를 풀어버렸다. 민간 업체가 임대 사업을 벌일 수 있게 한 것이다.

정확히는 이렇다. 민간 업체가 정부



2007년 7월 19일 부도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보증금 전액 보장을 요구하는 광화문 시위를 하고 있다

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임차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정부로서는 임대아파트를 늘린다는 생색을 낼 수 있었고, 민간 건설업자에게는 황금시장이 열렸던 것이다.

민간 건설업자는 자기 돈 한푼 안들이고 수익을 남길 수 있었다.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 은행으로부터 차입해서 아파트를 짓고는 임대료 수입으로 이자 갚다가 분양해서 부채(대출잔액)를 갚고도 돈이 남는 것이었다.

나대지였던 땅에 아파트가 들어섰으니 5년 후에는 아파트 가격이 엄청 뛰었다.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이 시장에 뛰어 들었다.

그러다가 국민주택기금을 연체하거나 이자를 못 갚으면서 부도가 나는 업체들이 발생하게 됐다. 그 규모가 2006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7만여 가구에 이르렀다. 나도 그 중 일부였다.

엄청난 규모의 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니 정부와 정치권이 화들짝 놀란 건

당연했다. 주민들이 전국적인 연합체를 구성하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 아파트에서 옥상 시위, 과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 등을 벌였다. 그 결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07년에 제정됐다.

그 전에는 임차인 보증금이 채권 변제 순위에서 국민주택기금에 밀려 보증금 일부를 떼일 처지였는데, 이 법으로 LH가 매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서 보증금 전액을 보전 받게 됐다.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도 지금처럼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법 시행 일 이전에 부도가 난 임대아파트에 한정한다거나 부도가 난 이후에 계약한 임차인은 안 된다거나, LH가 경매를 통해 임대아파트를 매입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그때도 문제가 됐다.

그런 조건들 모두 임차인들을 갈라치고,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 또한 계속 문제 제기와 싸

움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이 법을 보면, 원칙은 LH가 경매를 통해 부도 임대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지만 LH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는 경매 없이 매입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이를 지금에 적용해보면 LH가 임차인과 합의해 매입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행히도 나는 투쟁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고도 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최근 기사를 보면 2021년에서야 이 문제가 일단락됐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속절없이 시간은 지나가지만 자신의 보증금이 묶인 사람들은 정말이지 피가 마르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결국은 이렇게 들어줄 것을 처음에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제도와 법이 미비돼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등등 온갖 변명을 책임 회피로 일관했었다. 하지만 다 거짓말이었다.

미비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가 피해 보전과 회복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피해자들이 뭉쳐 싸우고서야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현재 전세 피해 해법을 두고 원희룡은 전세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고 떠든다. 모든 사기 피해는 동등하다며 막말을 쏟아낸다. 오로지 전 정부 탓만 하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세 보증금 일부를 선구제 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과연 이를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한심하다.

당시에도 특별법 제정을 두고 포퓰리즘이니 뭐니 했지만, 우리 모두 정부 정책의 서민층 피해자였고, 건설업자들의 부도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임차인들이 떠안았기에 보증금 전액 보장은 당연하고도 정당한 요구였다.

그때도 가능했고, 지금도 가능하다. 다같이 모여서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해야 한다. 국가 정책의 피해자들인 전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나서 보증금 전액 보장해야 한다.

이재환

간호법 논란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 말라

정진희

간호법이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간호법 반대 측(‘보건복지의료연대’)이 반발하며 항의 행동을 벌였다. 5월 3일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소속 간호조무사들이 ‘연가 투쟁’을,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의사들이 반나절 휴진을 하고 함께 집회를 열었다.

반대 측은 17일에도 연가 투쟁과 집단 휴진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윤석열에게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하기 위해서다. 간호사들과 간호대생들은 5월 12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의 간호인력 관련 조항을 떼어내 독립된 법으로 만들었는데, 간호사의 활동 영역에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사회’를 추가하고(기존 관련법들에 산재해 있던) 간호사 처우 개선 사항을 통합했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협회(간협)의 숙원 사업이었다.

간협이 주도하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는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의료노련(한국노총)과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많은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간호법 반대 측은 개원의가 주축인 의협이 주도한다. 의협, 병원협회, 민간 돌봄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같은 사용자 단체, 그리고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의 직능단체가 들어 있다.

이번 법안은 2021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세 법안을 합쳐 만들었다. 그러나 그간 국회는 의협과 병원협회 등의 반발을 의식해(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다.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통과되자 국회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은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선에 불리할까 봐 눈치를 보고 있다. 간협이 거부권 행사 시 단체 행동을 경고했고, 여론도 간호법 반대 측에 우호적이지 않다. 그러나 의협 등의 반발이 크고, 간호법 처리가 여야 간 대치 쟁점이 됐기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거부권 행사의 법적 시한을 고려하면, 오는 16일 국무회의나 19일 입

간호사들과 간호대생들이 5월 12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시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이뤄질 듯하다.)

하지만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성이 없다.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다(공약집에는 안 넣었지만 국민의힘은 간협과 정책 협약 등을 했다).

간호법의 성격

고령화 대응에 필요한 지역사회 간호·돌봄 인력 확보, 감염병 대응과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 등이 간호법 제정 취지다. 애초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조정,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가 돼) 통과된 법으로는 애초의 기대감을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할 듯하다.

간호사 처우 개선에 필요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명시됐지만, 구체적

내용은 별로 없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의무화 등 약간의 개선책이 신설됐지만, 간호사 근무조건 개선에 필요한 인력 배치 기준과 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은 빠졌다.

또 다른 간호 인력인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책이 들어 있지 않아 아쉽다.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은 대체로 선언적 수준이다. 그럼에도 간호법이 별도로 만들어진 것에 의미를 두는 간호사가 많다. 향후 법 개정이나 시행령으로 더 얻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이다.

간호사들은 의료인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협회나 노조로 잘 조직된 편이다. 그래서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처우 개선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호법은 매우 미흡하므로, 1인당 환자 수 축소 등 실효성 높은 요구를 성취하려면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

의 투쟁이 크게 성장해야 할 것이다.

갈등의 쟁점

통과된 간호법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협 등 각 직능단체들이 반대하는 내용이 대부분 빠졌다. 새로 들어간 내용 중 남은 것이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로 넓힌 부분이다. 이 문구를 놓고 의협 등 여러 직능단체의 반발이 크다. 향후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돼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런데 간호법에 간호사의 활동 영역으로 ‘지역사회’가 명시된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이미 간호사 7만여 명이 병원 밖 ‘지역사회’(보건소,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학교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의협은 간호법의 ‘지역사회’ 문구 때문에 장차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하거나 단독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간호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상의 업무 범위를 따르고 있다.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단독으로 열거나 단독 진료를 하려면, 의료법이 개정돼야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문구를 둘러싼 직능단체들 간의 갈등은 고령화 가속화 속에서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의 활성화를 누가 주도할 것인지와 관련한 성격이 있다. 보건의료, 복지에 대한 국가의 투자 미비, 시장화된 의료, 돌봄 시스템 속에서



조지현의간호법연대



보건의료·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공공기관 확충이 필요하다

각 직능단체들이 업무 범위 문제를 놓고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계급 등 서민층의 필요라는 면에서 보면,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돌봄서비스가 얼마나 보편적이고 양질로 제공되는가가 중요하다. 제대로 된 지역 보건 서비스라면, 다양한 보건의료직역들이 협력하는 게 필요하고, 정부의 충분한 재정 지원과 공적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인 복지는 자본주의 이윤 논리 때문에 가장 후순위로 밀린다. 정부 재정 지원 부족과 시장화 정책으로 인해 서민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노인을 위한 의료와 돌봄에서 공공성 강화는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는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의료와 돌봄 시장화를 더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용자들의 반발과 정부의 복지 삭감에 맞서 노인과 서민층 복지를 확대하려면 노동계급의 투쟁이 성장해야 한다.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간무협은 연가 투쟁을 벌이는 등 의협과 함께 간호법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 있다.

간호조무사들이 모두 간무협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간호법을 지지하는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노련에도 간호조무사들이 가입해 있다. 이들은 노조 입장과 다른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보건의료노조에 확인한 바로는 간호조무사 조합원들의 입장은 개인별로 다르다고 한다.

간무협이 문제삼는 간호법 조항(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한다는 규정,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은 모두 현행 의료법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그럼에도 간무협은 간호법 반대 이유로 간호조무사 일자리 침해 우려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규정을 꼽고 있다.

첫째, 간무협은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조무사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다고 주장한다.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한다는 간호법 규정 때문에 요양시설 등이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쓸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한다는 규정은 간호법에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의료법에 있는 조항이다. 다만,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새로 간호법에 들어갔기에 이런 규정이 차후 시행령을 통해 어떤 변화를 낳을지 불확실한 면이 있다.

사실,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서민층 사람들 입장에서는 간호조무사만이 아니라 간호사도 함께 채용되는 게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과 민간 시설의 이윤 추구 때문에 인건비가 낮은 간호조무사만 고용한 곳이 많다.

지역사회 노인 요양기관들이 압도적으로 민간시설이고 시장 논리로 움직이

는 상황에서는 서민층 노인을 위한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간호사든, 간호조무사든)은 다른 곳에 비해 임금과 노동조건이 더 열악하다. 국가가 공공요양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충분한 인력을 고용해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의 근원에는 정부와 병원들이 간호조무사제도를 통해 간호사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쉽게 무시하고, 손쉽게 간호조무사를 늘려서 값싼 대체 인력으로 활용해 온 데 있다. 의료기관과 돌봄 시설이 이윤 논리로 운영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노동조건이 열악해진다. 공공의료, 공공돌봄 시설과 인력 대폭 충원을 위해 단결된 투쟁이 있으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이롭다.

둘째, 간무협은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조항이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들어간 것에도 반대하며 2년제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시험 응시 자격이 고졸로 제한된다는 간무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년제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설치하는 간협과 간무협이 2010년대 중반부터 갈등을 빚어 온 문제다. 간무협은 간호법에 이를 넣으면 간호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간협의 거부로 이것이 포함되지 않자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이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보다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한다면, 간호사들이 이에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학력도 높고 처우가 더 나은 간호사들이 이에 반대한다면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에게 반감을 갖기 쉽다. 그리 되면, 사

측이나 정부의 이간질이 쉬워져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도 이롭지 않을 것이다.

간호사들이 정부와 병원들이 간호조무사 제도를 숙련된 간호 인력 확충을 기피하는 데 이용해 온 것에 반감을 가지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들이 그런 정책을 만든 주체는 아니다. 간호조무사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교육 훈련 기회 부족 등에 불만이 많다.

2년제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설치하는 간호조무사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특히, 기존 양성기관(특성화고, 학원, 평생교육기관)에서 배출된 간호조무사들은 전문대 간호조무학과가 신설되면 앞으로 간호조무사 내에도 등급이 나뉠 것을 우려한다.

전문대학 간호조무학과 신설로 일부 간호조무사의 지위가 개선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간호 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 전반의 낮은 지위와 당장의 불만(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제대로 된 교육 훈련 기회 부족 등)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에 대한 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간무협이 간호조무사들을 저임금으로 부려먹는 사용자와 함께하며 간호조무사 차별의 근원이 간호사나 간호법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간호조무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정부와 사측으로부터 독립해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스스로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도 이전 정부처럼 보건의료와 돌봄에 충분한 재정 지원을 회피하며 간호조무사들을 값싼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편인 양 말하는 것은 위선적인 이간질일 뿐이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후쿠시마 핵 오염수, '과학적'으로 검증한다고?
- ★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운동 100일: 마크롱에 맞선 거대한 운동이 보여 준 잠재력과 과제
- ★ 역내 불안정 고조에 일조할 윤석열의 G7 회의 참석
- ★ 코민테른 해산 80년: 세계혁명의 이상은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가
-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저지른 '나크바(재앙)' 75년
- ★ 수단 유혈 사태에 관한 국제사회주의경향(ST) 성명
- ★ 칠레 제헌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제1당이 되다



청소년 마약사범 폭증? '마약과의 전쟁' 뒷받침하기 위한 과장과 위선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며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사용 문제를 연일 부각하고 있다.

"10대 마약공화국", "10대 마약사범 폭증", "학교에 스며든 마약" 등 선정적인 언론 보도도 난무한다.

보도들을 요약하면 이렇다: 요즘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서 너무 쉽게 마약을 구하고, 호기심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마약을 사용한다. 이런 현상이 걷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마약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이 있는 뒤에 이런 목소리가 더 커졌다.

정부의 관계 부처들도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검경은 청소년 대상 마약 제검자를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형량을 높이고 학원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온라인상 마약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복지부는 재활센터 확대, 법무부는 예방교육 확대 등을 내놨다.

청소년 마약 사용자가 늘어난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인다.

대검찰청이 내는 통계를 보면, 지난해 10대 마약류 사범은 481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12배로 증가했다(전체는 1.9배로 증가). 다만, 마약류 사범 숫자는 실제 마약 사용자의 20~3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의도나 성과에 따라 그 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증가 폭이 현실을



억압기관 정당화 위해 '마약과의 전쟁' 요란하게 벌이는 윤석열 정부

는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마약 가격이 싸진 데다가 과거와 달리 SNS 등을 이용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도 판매자와 접촉할 수 있어서 청소년들도 마약에 접근하기가 더 용이해진 것은 사실이다.

마약의 위험성과 중독성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의 마약 사용 증가는 분명 경계심을 가질 일이다. 정부 차원의 적절한 조치와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 10대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전체의 2.6퍼센트 정도였다(481명).

이들이 모두 중독 상태인 것도 아닐 수 있다. 대표적인 청소년 마약 검거 사례를 보면 많은 이들은 '부작용 때문에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이 최근에 갑

자기 불거진 일도 아니다. 마약류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10대 사이에서 본드나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10년 전엔 1089명으로, 2021년의 36배나 됐다. 이 수치 역시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청소년들의 마약 사용은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하에서 점점 깊어지는 소외와 억압에서 비롯한다.

마약류로 지정된 디에타민은 '다이어트 약(일명 '나비약')으로 알려져 여성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 약을 사용해 검거된 한 남학생은 운동 선수인데 체중 조절 실패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중독성과 독성이 강해 매우 위험한 마약인 펜타닐 패치의 판매·투약으로 검거된 56명의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풀고' '기분이 좋아지려고' 이를 사용

했다고 한다. 그 중 한 명은 학업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생겼는데 이를 투약하면 잠을 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진정한 의도

정부와 언론은 청소년 마약 사용을 과장하고 위기감을 키워 정부가 벌이는 '마약과의 전쟁'을 뒷받침하려고 한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부각해서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다.

한편, 한동훈 등 정부 관료 일각은 '마약과의 전쟁'을 검찰 수사권 회복의 지렛대로 삼으려고도 한다. 마약류 사범 증가가 문제인 정부의 검찰 수사권 축소 때문이라면서 말이다.

본지가 지적했듯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은 국가 권력을 강화하고 노동자 등 서민층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관련 기사: 본지 457호, '윤석열은 경찰력 정당화 위해 '마약과의 전쟁' 벌인다')

보수 논객들은 '마약과의 전쟁' 승리를 위해 검경의 예산·인력을 대폭 늘리고, 위장 수사를 인정하고, 인터넷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부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억압기관의 권한 강화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로울까?

입시 경쟁 강화나 긴축 등, 소외와 억압을 더 한층 강화하는 개악을 쉴 새 없이 밀어붙이는 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은 지독한 위선일 뿐이다.

성지현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일시 | 5월 17일(수) 오후 8시
발제 | 이정규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참가신청 bit.ly/0517-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